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26일까지 지급… 2조8000억원 규모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2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원래 법정지급 기한은 9월 말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높아진 저소득층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으로 2021년 소득분 관련한 지급이다. 지난해까지는 반기정산분을 합쳐서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난 6월에 이미 반기정산분을 지급했기에 5월 정기신청분만 지급된다. 지급자 수는 290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모든 정기 신청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알려주는 한편,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저자산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 합산 자산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일 경우 지원받는다.

단, 전세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8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에 한해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지만, 장려금은 10% 감액된다.

법에 묶인 지방세 감면… 지자체 조례로 풀다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금감면 운영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경우 사업 유형에 맞춰 별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방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를 위해 산 주택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해 추정 배제사유를 줄였다.

관세청, 추석 맞아 '24시간 통관' 가동…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이 추석을 맞아 24시간 통관 및 관세환급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특별지원대책 시행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5일 추석명절 연휴 기간을 맞아 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 화물 적기선적 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29일부터 12일까지 15일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될 것을 대비해 인천과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